

# 지역여건을 고려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전략

2010.12.3

조 만 형  
(한남대학교)

- 
- I. 문제의 근원
  - II. 총청권의 대응
  - III. 향후 추진전략

# 문제의 근원: 입지선정

## 대구경북 ‘동남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’

-  대구경북 10개 기관 공동유치 MOU  
(경북도, 대구시, 포항시, 경주시, 영천시, 경산시  
대구경북연구원, 대구경북지역대학교육협의회, 포항공대  
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)
-  충청권 과학벨트와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인수위에 건의
  -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함

## 입지선정에 대해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으로 선회

-  국토연구원: 입지선정과 관련해 총 18개 지역을 대상으로 평가
-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에 특정지역을 명기하지 않음
-  정부의 입장: 선 특별법 통과, 후 입지선정
-  충청도의 고민: 법을 통과시키자니 충청도 입지선정이 불확실하고, 법을 막자니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 같고...

# 충청권이 아니라 대구경북의 협약식



# 문제의 근원: 세종시 + 알파

- ✚ 세종시를 보다 완벽하게 건설하기 위해서 벨트사업이 필요
  - ☀ 시기적으로 세종시의 공약은 노무현 정권 때, 벨트의 공약은 이명박 정권에 제시됨
  - ☀ 현 정부에서 벨트를 충청권에 제안한 배경은 충청권 유권자들 의식한 측면과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기능
  - ☀ 세종시와 벨트는 교환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보완의 관계임
- ✚ 세종시 수정안의 부결에 따른 과학벨트의 기구한 운명
  - ☀ 세종시를 수정하여 행정복합도시에서 경제복합도시로 변경하려던 현 정부의시도가 무산됨
  - ☀ 세종시의 대안으로서 벨트는 다시 주목을 받게 된 측면은 매우 긍정적이나, 반대로 수정안이 폐기됨으로써 충청권의 벨트 공약도 무산될 가능성 있음
  - ☀ 과학계에서는 벨트를 정치와 연계시키지 말라고 하지만 벨트는 이런저런 사유로 이미 민감한 정치적 이슈가 되었음

# 충청권의 대응

## ✚ 거저 주는 것도 챙기지 못하는 충청권

- ✚ 벨트는 충청권이 자력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대선공약으로 던져준 선물
- ✚ 정치권이나 충청권은 벨트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급조한 측면이 있음

## ✚ 충청권의 논리

- ✚ 대통령 공약사안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
- ✚ 세종시 수정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여러가지 여건상 충청권이 최적
- ✚ 그러나 타지역에서는 충청권이 최적지라고 생각하지 않음

## ✚ 3개 광역자치단체가 각개 약진

- ✚ 3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벨트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지 의심
- ✚ 3개 광역시는 각각 따로 벨트를 추진. 심지어 소지역주의
- ✚ 대덕연구단지는 벨트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방관적

# 대구경북의 대응

## ✚ 없는 것도 만들어서 챙기는 대구경북

- ☀ 대구경북 은 광역자치단체, 기초자치단체, 대학, 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대응
- ☀ 압도적인 정치력으로 대통령 인수위 단계부터 대구경북권에 벨트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경주

## ✚ 대구경북의 논리

- ☀ 대경건의 경우 포스텍 및 경북대를 중심으로 한, 우수한 대학인프라가 존재
- ☀ 또한, 구미, 포항등지를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의 집적지로서 대경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통해 산, 학, 연이 상호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최적지로 판단됨

## ✚ 대덕특구의 문제점 지적(대경권의 관점)

- ☀ 대덕특구는 국내 연구개발집적지로서 현재까지 30조이상의 국가연구개발자금이 투입되었음
- ☀ 그러나 산업인프라가 미흡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통한 부가가치달성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, 이에 연구개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

# 정부의 대응

'07. 11월

**한나라당 대선 공약과제 중 과학기술분야 과제로 선정**

' 08. 9월

**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 설치, 운영('08. 9.19 ~현재)**

' 08. 10~11월

**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과학기술계 공감대 형성 노력**

- 토론회, 설문조사, 전문가FGI, 관련 학회 연석 회의 등

' 09. 1월

**종합계획 확정('09. 1. 13)**

- 국가과학기술위원회 (위원장 : 대통령)

' 09. 2월~

**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추진**

- 국무회의 의결(2.12), 국회제출(2.13), 교과위 상정(3.11), 공청회(4.16)

' 09. 3월~

**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기획연구 착수**

- KISTEP, 산업연구원, 국토연구원,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참여

# 정부의 대응

- ❖ '09.2월      **정부안 국회 제출**
- ❖ '09.3월      **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(교과위) 전체회의 상정**
- ❖ '09.4월      **교과위 공청회 개최 및 법안심사 소위 회부**
- ❖ '09.7월      **교과위 법안심사 소위 상정 및 논의(7.7, 7,10)**
- ※ **현재 교과위 법안심사 소위 계류 중**

# 충청권 전략: 대선공약에 집중

## ✚ 현재의 정권과 미래 정권의 공약

- ☀ 현재 정권과 미래 정권에 대해서 대선공약을 실천하도록 하는 정치적 압박이 최선의 방법
- ☀ 현재 정권: 행복도시, 대덕연구단지, 오송오창의 산업단지를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
- ☀ 미래 정권: 차기 대전후보군에 충청권 공약 약속. 박근혜의 선택?

## ✚ 금년 내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

- ☀ 만약 올해 통과가 안되면 공약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 있음
- ☀ 정부안대로 특별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청권 선정을 정치적 투쟁을 통해서 획득

## ✚ 김황식 총리의 발언은 정치적 접근의 성공가능성 확인

- ☀ “공약사항은 원칙적으로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”
- ☀ 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로선 그에 따라 집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뒷받침하겠다”

# 충청권 전략: K벨트로 타지역 포용

## 충청권 독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움

- 타지역에서는 충청도에 지나치게 많이 편중되었다는 생각
- 대덕연구개발특구, 세종시 등은 타지역의 관점에서는 지나친 혜택
- 세종시 수정안에서 제시한 K벨트를 참고로 하여 타지역을 배려하는 전략으로 하되 핵심사업은 충청도에 유치

##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사업의 핵심

-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핵심사업
- 그 중에서 중이온가속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 불가
- 가속기는 향후 계속 확장되고 시설투자는 장기간 지속됨
- 원래 과학자들이 원하는 그림이 가속기 중심의 은하도시

## 충청권으로 공동으로 C벨트 전략의 추진

- 세종시에 가속기를 배치하고 대덕과 오송오창을 연계한 전략
- 소지역주의를 탈피하고 일단 충청권에 벨트가 유치되도록 협력

# 충청권 전략: 은하도시의 뿌리를 찾아서

## ✚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은하도시 포럼

- ☀ 2004년 9월 과학과 예술의 만남(랑콩트르)에서 출발
- ☀ 2006년 은하도시 포럼으로 공식 단체로 창립총회 개최
- ☀ 초대회장 민동필 교수: 인수위 국제과학벨트 TF 팀장
- ☀ 2007년도 이 포럼이 주관한 '포스트 나노시대를 준비하는 펌토과학 비즈니스 도시 국제포럼'에 이명박 후보 참석
- ☀ 이후 한나라당 충청권 공약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제시

## ✚ 중이온가속기가 핵심

- ☀ 은하도시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최고의 실험장비로 예술을 즐기며 연구하는 꿈의 도시
- ☀ 조청원(당시 국립과학관장) 축사: 우리 서울도 예술에 기반한 과학이 흐르는 도시가 될수 있기를 바란다(충청도가 아니었음)
- ☀ 프랑스의 그레노블, 스위스의 제네바 등이 참조 모델
- ☀ 은하도시 포럼의 핵심사안은 가속기
- ☀ 충청권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중 중이온가속기를 확보하는 전략